

[종합]

■ 강재섭-이재오 선암사 만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전당대회 이후 순천 선암사에서 접거 중인 이재오 최고위원을 찾아와 화해를 시도했다. 강 대표의 이날 이 최고위원에게 ‘(원내)대표’와 ‘선배’라는 존칭을 쓰는 등 최대한 예우를 하며 당무 복귀를 부탁했지만 기대했던 답을 듣지 못했다.

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은 선암사의 삼전(三殿)에서 회동을 가졌다. 강 대표가 먼저 “마음 고생이 많으시죠”라고 하자 이 최고위원은 대답없이 웃어 넘겼다. 강 대표는 이어 “전당대회 하면서 뿌리가 어찌고, 과거 생각이 어찌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지만 당 잡되자고 한 일이었는데~”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털어버리고 가고 싶어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를 푸셨으면 한다. (이 최고위원은) 정의감이 있고 분명한 분이다. 잘 모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의 간청에도 묵묵부답이던 이 최고위원은 “비오는데 이렇게 오셔서~”라고 즉답을 피했다.

두 사람은 10분여 대화를 나눈 뒤 선암

“이재오 선배, 이전 화 푸시죠”
“10년 동지에 색깔론이라니...”

강재섭 대표 화해 시도에 이재오 최고 즉답 회피

사 주지 금융스님 등과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강 대표는 “당에서 인사를 하려는데 화요일 아침에는 공개해야 한다. 월요일에는 올라오셔야 협의할 수 있다. 이 최고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화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위원의 노기는 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정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대표와 만나기 직전, 본사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 대회를 통해 한국 현대정치사의 부정적 면

적 같고 모함 등 추악한 면이 드러났다”며 “이것을 적당히 미분하고 웃는 모습으로 국민을 다시 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고 매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특히 “선을 넘은 것은 색깔론이다. 한나라당에 와서 어려운 세월 동안 3선을 하고 사무총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는데 색깔론을 내세우는 것은 동지이길 거부한 것이다”며 “승부가 끝났으니 이제 사이 좋게 지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 였다.

특히 당의 정세성에 대한 회의도 답변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 최고위원은 ‘원래부터 이 최고위원과 한나라당의 색깔은 다른 것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에) 많은 상처를 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색깔론이 도질 수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구조다” “이런 상태로 대선에서 이긴다 한들 뭐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말해 전당대회로 생긴 ‘암금’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15~16일 지리산 등 반 뒤, 17일께 상경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 설

국내외 악재 속출, 경제 앞날이 걱정이다

고유가, 일본 금리 인상 등 해외 악재가 한꺼번에 불거지고 내부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기업 실적 부진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 경제 앞날이 암울하다. 여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과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FTA 협상 등도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고유가는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시켜 우리의 수출과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압박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 등의 전제조건을 원다 한들 뭐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말해 전당대회로 생긴 ‘암금’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15~16일 지리산 등 반 뒤, 17일께 상경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상황으로 돌변시킬 수 있다. 특히 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의 불안정은 기업과 가계의 불안 심리 확산으로 이어져 경기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라는 당장의 도전만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이제 비경제적 이슈에 끌려다닐 여유가 없다.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우리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거센 변화의 파고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없다.

경제 현안은 우선 순위와 그 비중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처방을 요구한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경기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참여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경제부터 살려야 할 것이다.

실효성 의문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가 14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거론됐던 정부의 각종 정책이 총망라돼 있다. 한마디로 사회·경제구조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용은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제 도입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령화사회 대책으로는 정년 연장, 정년 퇴직자 재고용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계획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노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실현방안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신규 예산사업이 거의 없을 만큼 정부 각 부처에서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재원조달 방안도 불투명하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은 한마디로 돈과 싸움’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3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지출 억제와 지역업체에 대한 소득 파악률 제고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정도의 방안으로 재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세급 부담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도 예상되고 있어 이번 계획이 자칫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韓美 FTA, 마지막날 협상 모두 취소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갈등 심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마지막날 14일 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일방적으로 모든 협상 일정을 취소했다.

양측이 마지막날 협상 일정을 모두 취소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측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양측간 갈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협상도 미국측이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닷새간의 협상기간에 이 작업반의 협상이 전혀 열리지 못했다. 그동안 양국 협상단은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서비스 유보안 교환, 상품분야 양허안 틀 합의, 협정문 이견 일부 해소 등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농산물, 의약품,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들은 양측 입장이 계속 맞서면서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이 미측이 반발, 첫날부터 협상이 중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마지막날인 14일 양측이 일방적으로 모든 협상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김중훈 수석대표가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국제원유價 모두 사상 최고치

두바이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브렌트유 등 3대 국제유가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3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에 비해 1.49달러 오른 70.39달러를 나타내 사상 처음 70달러를 넘어 사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선물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다.

브렌트유 선물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다. 석유공사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 공세와 이란 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 등 지정학적 악재가 겹쳐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가 급등, 일본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14일 증시는 코스피가 전날보다 29.89포인트 내린 1255.13까지 떨어졌으며, 코스닥도 11.45포인트 내린 559.66을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부동산 거래세 연내 최대한 인하”

김석동 재정부 차관보, 1주택자 양도세는 안 내려
울 건설업 위축 0.7% 성장·내년초 저점 살아날 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부동산 거래세를 최대한 인하하도록 노력해 올해 안에 인하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물론 개인과 개인간 거래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PBC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보는 “올해 공시가격이 16% 가량 올랐는데 실제 주택가격 상승분이 12~13%를 차지하고 과표 현실화로 올라간 부분은 3%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현재도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15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45%까지 공제, 실제 내는 양도세는 차익의 10% 정도 수준에 불과한 만큼 부동산 과표 조정이나 양도소득세 인하 계획

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추정해 거래세는 최대한 인하하겠다”면서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물론 개인과 개인간 거래도 낮출 수 없는 지 관계부처와 논의해 올해 안에 최대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규제완화와 관련 김 차관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인데 10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안에 정부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투자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기전망과 관련 김 차관보는 “건

설업의 경우 당초 올해 연간으로 2% 성장을 전망했는데 위축국면이 이어지면서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대주택 사업과 기업도시, 행정복합중심도시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민간자본을 잘 활용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초를 저점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보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올해 2.4분기 이후에도 전기 대비 1% 성장을 유지, 연간으로는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김 차관보는 “경제불안 심리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사태전전 추이에 따라 좌우되었지만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도록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동영 독일 ‘단기유학’ 출국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동영 전 의장이 15일 독일로 출국한다.

부인 민혜경씨와 함께 출국하는 정 전 의장은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한달간 체류할 예정이다.

정 전 의장은 “세계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

김상현 전의원 사전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기회부동산 ‘대부’ 김현재씨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 전 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김 전 의원이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인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작년 2월까지 김씨로부터 13억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불법도청’ 임동원·신건 前국정원장 집유

‘국정원·안기부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1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동원·신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장기간 조직과 인력이 투입된 점에서 적어도 포괄적, 대략적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

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8국으로부터 통신정보보고서를 보고받아 불법감청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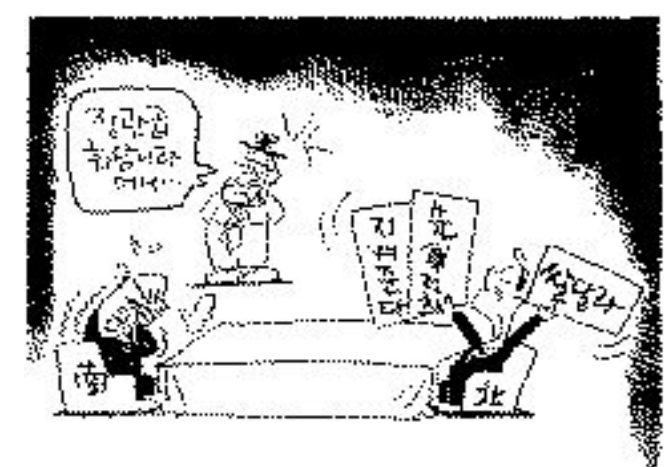
재판부는 “국정원장이었던 피고인들은 통신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작위 의무가 있는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거나 구체적 조치로 나아가지 않아 위법한 부작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직접적 불법감청 행위와 동일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신건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임동원씨는 “변호인과의 상의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역시 壯觀이다

당정 “아동 수당제 도입 추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마련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도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당정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2조 746억원을 투입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증진함으로써 확대해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까지 0~4살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 5살 아동과 장애아동,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방과 후 학교를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비영리 민간기관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출산 크레디트제도 도입된다. 무주택 자녀 가정에는 공동주택 우선 분양 혜택이 제공되고 국민임대주택도 특별 공급된다. 이를 위해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시 장기분할상환제도 도입 등 주거문제 지원방안도 실시된다.

입양활성화를 위해 18살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매달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 /임동욱기자 tuim@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ubscription rates.